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정상화전략과 거시경제적 결과

권 영 경*

- I. 서론
- II. 김정일의 북한경제회복·정상화전략 구상: 선군경제발전전략
- III. 선군경제발전전략의 거시경제적 결과
- IV. 맺음말

요 약

극심한 경제난 이후 김정일이 세운 경제회복·정상화전략은 선군경제발전전략이었다. 이는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이후에도 지속되어 나가는 북한 선군사회주의체제의 재건·재생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선군경제발전전략은 이미 군산복합형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북한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재건하고 기존의 자력갱생발전노선도 계승해 나감과 동시에 1980년대 경제수준을 뛰어넘는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경제회복·정상화를 위한 실행 경제정책들은 국방산업의 유지발전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추어 있는 정책들로서 전개되어 나갔다. 즉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예산의 상대적 지출증대 및 5개년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라 국방공업발전에 연관되어 있는 기간산업·선행 산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 및 기술개건사업 진행, 국방산업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잉여 산출을 위해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 등의 정책들을 지난 11년간 시행해 왔다.

* 통일교육원 교수

그 결과 북한의 거시적 경제는 '90년대의 생산력 붕괴현상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산업순환의 회복기미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여전히 '80년대 경제력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국민경제내에서 군경제부문의 비중 증대와 인민경제내 시장경제공간의 확산이라는 왜곡을 가져왔다. 2005년 하반기 이후 시장통제와 '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은 이 왜곡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응이지만, 아마도 북한의 경제회복·정상화 전략의 모순을 더욱 확대시켜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모순의 극대화는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 또 다른 경제정책의 널뛰기 현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I. 서론

'90년대 경제위기 이후 '98년도에 출범한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은 그야말로 좌에서 우로, 다시 우에서 좌로 극심하게 널뛰기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김정일정권은 변화를 화두로 삼는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까지 시행하였으나, 2005년 중반경부터는 시장 통제와 전통적인 경제관리방식의 복원을 의도하는 경제정책을 전개하면서 2009년에 들어와서는 150·100일전투 등 고전적인 노력동원정책과 함께 11월 30일 드디어 강제적으로 시장의 민간자본을 환수하는 '화폐교환조치'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의 북한경제 관찰자들은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북한식'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려 한 다거나 아니면 계획경제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시도일뿐이라고 조망하는 논쟁을 벌였으

며, 최근에는 그간의 북한의 경제정책들이 후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이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정책의 널뛰기 현상에 외부 관찰자들 자신도 우왕좌왕식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98년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전개해온 경제정책들을 매트릭스판에 올려놓고 구조화해보면 그리 저력(muddling through) 대응방식에 의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경제회복·정상화구도에 따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98년도에 김정일정권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전통적인 '자력갱생 민족경제발전노선'의 재차 강조와 동시에 헌법개정에 시장기능적 요소를 일부 반영했었다. 그리고 '99년도에 인민경제계획법을 발표하고 2000년도에 사회주의강성대국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더니, 2001년도에 신사고론을 제기하고 2002년

도에는 계획기능과 시장기능의 접목을 의도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였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면서 9월에는 '선군경제건설노선'을 선군시대 북한의 경제정책노선으로 공식 표명했었다. 이후 3년간 경제관리개선조치 실험을 행하고 200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시장을 억압하며 과거회귀적 정책을 3년여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정책 과정을 통해 북한의 거시경제적 결과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을까? 북한의 거시경제는 분명 '90년대 위기는 벗어났지만 '80년대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2차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은 점진적으로 성공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제는 완전히 정상화되고 있지 않지만, 선군경제는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북한경제에 대한 거시적 연구들은 북한경제의 '빈곤의 늪' 현상을 분석하는데 한정했을 뿐, 김정일의 경제정상화 목표를 규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거시경제적 현상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북한 산업경제가 제재국면하에서도 산업순환의 부분 회복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보면 왔다 갔다하는 정책들이 사실상 상호 연계된 텍스트속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통시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김정일의 경제회복·

정상화전략이 어떤 구도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 거시경제적 결과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현재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좌표도 고찰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김정일정권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그랜드 플랜을 갖고 경제회복·정상화전략을 시행해나갔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군경제발전전략에 따라 경제를 회복·정상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흔들린 적이 없었으며,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 좌적 성향의 정책, 우적 성향의 정책 모두 활용될 뿐이라는 입장에서 본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김정일의 북한경제회복·정상화 전략 구상: 선군경제발전전략

1. 선군경제발전전략의 배경과 목표

북한은 김정일시대를 이른바 선군시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전략을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으로 삼는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의 성취 목표는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전략으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다. 그동안 많은 북한연구자들은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내세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란 정치, 사상,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레토릭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상을 의미하는지 분석하지 않은 것 같다. 정치사상 강국을 의미하는 인민과 수령·당·국가와의 체제결속력, 군사강국을 의미하는 핵보유국화,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실리추구 등을 분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심도깊은 분석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주공전선이 경제강국이며,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실리전략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북한의 담론에 추수하여 북한이 북한식 개혁·개방의 실행차원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론을 내세웠다고 해석하기도 하는¹⁾ 문제점도 있었다. 북한의 문헌에 따르면 사회주의강성대국

은 “정치사상력, 군사력, 경제력이 강한 나라로서의 강성대국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튼튼히 다져지고 전면적으로 발전되어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는 나라...사회주의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주체조선, 김일성조선의 기상을 온 누리에 떨치는 나라”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단일화되어 있는 세계자본주의질서속에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생존·발전하여 연착륙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을, 1990년에 붕괴한 「현실사회주의」 이후를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주의발전단계를³⁾ 이룩하는 ‘건국강령’이라고 하고, 그 건설과정이란 다름 아닌 기존 북한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 1) 광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2000),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p.122; 조용기, “근 북한경제개혁동향 및 체제전환 사례분석”(2003),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3; 조영국, 『탈냉전기 북한의 개혁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2006), p.182.
- 2)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2000), 평양, pp.6~7. 최근 북한은 이러한 개념규정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다. 2009년 8월말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리기성은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은 보통의 경제대국이 아니라 주체의 사회주의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고 언급했다. 리기성, “새로운 혁명적 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2009년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자료집』, p.657.
- 3) 북한의 문헌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김일성 시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냉전시기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발전단계에서 북한 특유의 체제로 시조 체제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회주의체제는 ‘현실사회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발전단계로서 사회주의 역사발전단계의 최종 단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책, p.9, p.129.
- 4) 북한은 다른 한편 간부용 학습제강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요하게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연착륙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까지 북한 주도로 이룩하는 상황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구체적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출판사 간부용 강습제강,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대진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2000). 또한 친북적 재미교포로 유명한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운석씨 역시 2008.2.17일 새진보연대 코리아반도 대변기 세미나에서 “북한의 경제건설의 목표는 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정권의 구조가 더 강화되고, 반제투쟁의 물질적 기초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재생·재건전략 차원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론’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은 과거 진영질서와 같은 대외환경이 아닌, 초극화된 세계 자본주의 질서속에서 체제를 방어하며 성취해야 하는 문제로 되어 있다. 즉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압살하려는 제국주의세력들과 대결하며 건설을 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혁명과 건설의 문제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선군혁명노선을 김정일시대의 혁명노선으로 제기하게 된다.⁵⁾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것은 혁명의 주모순을 제국주의세력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생산력에서 구하고 생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혁명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선행의 원칙’은 모든 정책을 항상 군사를 선차로 놓고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군사는 단순히 군대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방공업과 이와 연관

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라고 규정한다.⁶⁾ 그러므로 결국 선군혁명노선의 본질적 원칙으로 제기되어 있는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대의 강화와 국방공업 강화 문제를 다른 모든 문제보다 항상 우선시하고, 이에 기초해서 정치의 방향과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으로 귀결하게 된다.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배분 및 재원의 활용 선택에 있어서 국방공업의 발전을 선차로 놓는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군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삼는 선군혁명노선의 필요조건 전략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8년 김정일정권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사회주의경제권(코메콘)의 붕괴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시행했던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을 폐기처분하게 된다.⁷⁾ ‘혁명적 경제전략’은 중화학공업 발전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정책노선을 수정한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등 이른바 3대 제일주의정책으로서 자본주의 진영 및 시장경제와의 접목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이

5)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자.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정치』 (2006), 조선로동당출판사, p.97.

7) 이태섭에 따르면 ‘혁명적 경제전략’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비판이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 이미 1995년 하반기부터 등장하고, 1997년 1월 신년 공동사설과 1월 24일 김정일이 전당 당일군회의에 보낸 서한 “올해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혁명적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를 계기로 1998년 신년사설부터 ‘혁명적 경제전략’ 용어가 사라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 서한을 보면 북한은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2001), 『2001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3권)』, 통일부, pp.253~257. 사실 김정일이 1997년 노동당 비서로 취임하기 전까지 김일성의 3대제일주의, 혁명적 경제전략을 외면상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김일성의 유혼기간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재원의 배분을 기존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및 농업에 우선시하고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적극 피력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생전에 ‘신경제전략’으로 제기되었던 이 경제정책은 북한 스스로 고백하듯이⁸⁾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고, '90년대 중반경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기 이전의 대내경제조건 속에서 수립된 정책이었다. 김정일의 발전 플랜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프레임을⁹⁾ 현실화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2. 선군경제발전전략의 경제정상화·발전 구상과 체계화 과정

나중에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표명된 김정일의 경제정상화전략은 1998년에 처음 제시되고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해¹⁰⁾ 2008년에 와서야 공개적으로 언급한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해”를 향해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갖고 시행해 왔음을 보게 된다. 이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김정일시대 북한의 전반적 경제회복·정상화 및 발전구상을 개관해보기로 한다.

북한은 90년대 중반경에 이르러 협동농장, 인민경제부문 기업소·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군수공장까지 거의 가동 중단 위기상태에 이른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군부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재원을 활용해 복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사용해 구축된 군경제부문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나마 50% 이상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경제부문도 군경제부문이었기 때문이다.¹¹⁾ 북한경

8) 북한은 1997년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김정일 플랜: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의 전략」이라는 안을 세웠는데, 이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 이는 1998년 1월 「조선신보」를 통해 알려졌다.

9)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97년간을 유혼통치기간으로 삼는 동안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위기극복과 체제수호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미래 구상을 동시에 고민하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담론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론을 구축한 것 같다. 그래서 98년 9월 ‘김일성헌법’ 개정을 공포하기 직전 8월 22일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사회주의강성대국론을 제시하고 그 상징적 징표로 98년 8월 31일 이른바 광명성 1호 미사일발사를 발사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의 출발 의지를 보이게 된다.

10)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헌법개정, 자립경제노선 및 중공업 우선 건설노선의 재천명과 더불어 12월에 제2의 천리마대진군선구자대회를 열고, 1999년 1월 1일 “올해를 위대한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고 1994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99년도에 94년 이후 4년만에 재정규모를 발표하여 정상적인 경제정책의 시행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11)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군경제 비중에 대해서는 군산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북한경제구조내 군경제부문의 경

제는 장기적으로 진행된 축소재생산 과정에서 인민경제 → 당경제의 순서로 위기를 겪어왔고, 군경제부문만 90년대 이후의 경제난속에서 생산의 순환적 과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 또한 군경제부문은 안정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무기수출산업뿐만 아니라 광물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가장 큰 외화가득 경제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군경제발전전략은 선군정치체제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군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재원을 북한경제 전체 복구의 원천으로 삼아 상시동원체제로 전환하고,¹³⁾ 군경제의 완전 정상화·성장을 원점으로 전인민경제의 정상화·회복의 방향으로 동심원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이 담겨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경제를 경제회복·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기존 자립적 경제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1980년대 경

제수준을 뛰어넘는 경제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¹⁴⁾ 이에 따라 북한이 구상한 경제정상화·발전을 위한 실행 전략들을 북한의 문헌들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과학기술부문의 정상화와 발전을 강성대국건설의 중심고리로 삼고 여기에 투자재원을 우선 배분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의 해, 즉 출발의 해로 선포한 1999년을 가장 먼저 ‘과학기술의 해’로 공표하고 이 해 김정일이 가장 먼저 현지도하는 현장으로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했었다.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하는 1998년부터 이미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 중이며, 이 계획을 2022년까지 5차에 걸쳐 시행해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제3차 7개년 경제계획(‘87~’93) 수립 이래 계

계선을 어디까지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자에 따라 최저 40%에서 최고 70% 비중으로까지 보는 견해들이 있다. 경제관료 출신 탈북자들은 대체로 당경제-군경제-인민경제의 비중을 2:3:5~2:5:3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경제위기속에서 군경제부문의 가동율도 최저 50%대에서 최고 70% 비율로 다양하게 나뉜다.

- 12) 성채기 외(2003)의 연구에 의하면 군비증강과 관련된 당경제 및 군경제는 1989년 대비 1999년도에 약 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민경제는 ‘89년대비 약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성채기 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 (2003), 한국국방연구원, p.29.
- 13) 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세미나 발표논문집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2004), 통일연구원, P.14.
- 14) 앞의 논문에서 리기성은 “고난의 행군을 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자립경제 강국으로 건설하려면 먼저 지난 시기 자립적 경제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최고 생산 수준을 돌파하고 다음에 더 높은 고지점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언급했는데, 최고 생산 수준을 이룩하였던 시기란 다음 아님 1980년대 중반 경이라고 한다. 리기성, 앞의 논문, pp.658~659.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외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가 북한이 가장 큰 생산력 수준을 나타낸 연대였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획경제의 마비로 장기 경제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면서도, 과학기술부문에 대해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이미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설사 공장도 못가동하고 과학기술사업만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¹⁵⁾ 하며, 인민경제의 정상화·발전 시도에 앞서 과학기술의 유지·발전에 주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는데, 특히 2004년, 2007년도에는 선행 산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5배 이상 높은 60%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 북한은 왜 경제정상화·발전의 중심고리로서 과학기술 발전문제를 내세웠을까? 이는 선군노선과 경제의 동시 발전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발전 토대위에서 전체 인민경제의 정상화·발전을 이룩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선군경제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 선택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¹⁶⁾ 심각한 경제난속에서도 무엇보다 군

사기술을 강화해 국방공업을 육성시켜나갈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북한은 2000년도에 과학기술을 사상, 총대와 더불어 강성대국건설의 3대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의중을 드러냈었다. 북한의 공식문헌이나 김정일의 언급을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민경제의 현대화·주체화 그리고 기술개건을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지만, 선군경제발전전략의 핵심인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해 1차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⁷⁾ 물론 요소부존도를 고려한 비교우위전략을 채택하지 않고, 자립경제노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산업구조와 산업설비들을 정상화, 기술개건해 나가는데 과학기술의 발전문제가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될 필요도 있었다. 이 경우 과학기술이란 북한 산업경제의 정상화·발전에 필요한 응용기술적 측면의 과학기술을 의미한다. 즉 원자재부족 때문에 최대한 국내자원을 활용해 산업경제를 정상화해야 하는 북한경제의 현실을 감안한 ‘주체기술’ 개발 측면의 과학기술을 의

15) 이는 김정일이 한 말인데(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p.40), 김정일의 또 다른 언급 “총이나 쌀이나 앞에서 민족의 운명을 생각해 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말과 일치한다.

16) 북한은 “과학기술을 더 잘 발전시키면...지금 마련된 경제토대를 가지고도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생산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력을 보다 공고히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p.50.

17) 이는 김정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가장 절실한 과학기술분야를 주공방향으로 정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김정일, 『당의 과학기술 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2003), P.3.

미한다. 예컨대 철강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전량 수입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활용한 ‘주체철’ 기술개발, 철강의 용해시간을 대폭 줄인 ‘초고전력전기로’의 개발, 화력 발전소에서 착화용 중유가 아닌 갈탄을 활용하는 갈탄착화방법 기술개발, 나프타 대신 석탄가스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석탄가스화공정’ 기술개발 등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군사기술은 최첨단기술로서 북한 인민경제를 단순히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른바 ‘단번도약’시키는데도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부문의 중심고리론을 정당화하기도 했다.¹⁸⁾

둘째, 2001년부터 산업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전체 산업생산 현장의 생산설비들을 그대로 활용, 완전 설비개건, 부분 설비개건, 부분 생산공정 개건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여 기술개건해나가는 일명 ‘현대화전략’을 수립했다.¹⁹⁾ 북한이 2002년 더 이상 쓸

모없다고 판단된 남포유리공장을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2001년부터 ‘혁신’, ‘개건’, ‘일신’, ‘과거 관례의 탈피’, ‘신사고’, ‘종자론’, ‘개방적 자력갱생’ 등 변화를 담지한 용어들을 누차 강조한 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개혁개방의 지향성보다는 산업정상화를 위한 생산혁신운동, 기술개건의 독려 의미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북한이 '99년부터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유달리 강조한 정보화와 IT산업의 육성도 바로 산업설비의 기술개건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개건전략, 즉 북한이 표현하는 일명 현대화전략은 앞서 언급한 강성대국건설 전략적 노선으로서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의 주관점에서 실행되었다. 그래서 산업생산설비의 기술개건은 국방공업과 연관된 핵심 산업부문 > 선행 산업부문 > 인민경제부문 순서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진행되고²⁰⁾, 일부는 국가의 재정지출로 또 다른 일

18) 이런 모든 관점에서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추동력을 과학기술에서 찾고,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p.41. 그리고 또 다른 북한의 문헌에서는 과학중시노선은 첫째,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해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둘째 붉은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혁명철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셋째 군사강국건설에서도 커다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넷째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당면 현실 때문에 혁명적 전략노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2000), 평양출판사, pp.31~37.

19) 2001년 북한의 홍성남 내각 총리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현재의 경제적 토대를 정비하고 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하며 각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당시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는 각 성, 중앙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기술개건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2002 북한연감』 (2002), 연합뉴스, p.509.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술개건대상을 분류한 것은 『조선신보』 2002. 1.14자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20)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8년 제4호)에 따르면 기술개건은 당장 실리가나는 것, 빨리 온(성과)을 낼 수 있는 것, 현존 경제적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당장 절실한 분야부터 기술개건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선행 산업부문 일부와 인민경제부문)는 기업소·공장내지 지방행정당국에 일부 경영권을 이양하여 자체의 노력으로 기술개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국가의 재정지출로 기술개건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은, 주요 외화가득 분야인 연,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30여가지 유용광물의 수출대금 일부를 개건·현대화 예산항목으로 흡수하여 충당하였다. 즉 북한은 광물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30~40%를 먼저 광산과 기업소의 생산설비를 갱신하고 현대화하는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지난 10여년간 전산업에 걸쳐 기술개건사업을 해온 것이다.²¹⁾

북한의 문헌을 보면, 먼저 기술개건 대상을 선정하고 산업설비수준을 기반 인프라와 연관해 분석하고 나서 완전 기술개건/부분

기술개건/생성공정 일부 기술개건 등으로 분류하여 지난 10년간 기술개건 작업을 해왔던 것 같다. 예컨대 북한의 문헌은 구성공작기계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은 생산공정의 일부 기술개건 방식으로, 기초식품공장은 완전기술개건 방식으로 기술개건작업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있다.²³⁾

그런데 생산설비의 기술개건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기술협력내지 해외로부터의 일부 설비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방적 자력갱생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업소들에게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신기술 설비도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사용권을 부여해주고²⁴⁾, 독립채산제를 현실화하는 등 실용적 정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고, 7.1경제관

〈표 1〉 북한의 기술개건 대상의 분류²²⁾

구 분	대 상 부 문
완전기술개건	지방공업·경공업부문, 닭공장 같은 식품가공부문
부분기술개건	지방공업·경공업부문, 중공업부문
부분 생산공정 기술개건	국방공업·기간산업과 연관된 핵심 산업부문
폐기처분	완전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형 공장

21) 「조선신보」 09. 8. 8자에 의하면 북한은 “광물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을 세워 전 산업의 기술개건 사업을 해왔다고 한다.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남은 연간 8만여톤, 아연은 20여만톤, 마그네사이트는 100만톤 생산되고 있어 일단 지속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원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2) 이 분류는 북한이 문헌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임의로 분류한 것임. 추후 지난 10년간의 북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기업소·공장들의 기술개건 내용들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p.66~67.

24) 대표적인 것이 구성공작기계공장이다. 북한은 이 공장이 완전하게 기술개건될 수 있도록 생산제품을 국내로 돌리지 않고 전량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금으로 원자재 수입, 설비투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고 한다. 「조선신보」 2003.10.9자.

리개선조치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면에서 요구되었다고 판단된다. 공장·기업소의 자체 노력에 의한 기술개건의 독려는 경제단위들에게 부분 자율성 부여 및 분권화 확대를 필요로 하게 한 것이다.²⁵⁾

북한의 산업설비들이 어느 만큼 기술개건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시행한 기술개건의 내용이 사실상 노후화된 설비들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도록 재가동하거나 부분대체하고, 그리고 일부 전략적 부문의 생산공정을 자동화·컴퓨터화하는 등의 수준이어서 경제정상화의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이 2009년 신년사에서 금속공업의 활성화를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00년대 이후 기술개건작업을 통한 부분적인 산업순환의 재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되고 있다.²⁶⁾

셋째, 재정난으로 과거와 같은 중장기 경제전망계획을 못 세우는 대신 중기 경제

획 및 부문별 경제계획을 세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주요 산업부문을 정상화시키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²⁷⁾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사설의 경제정책 강조점과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내각 재무상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확실해진다. 다음 <표2>는 이 두가지 내용을 합해서 정리한 표이다.

<표 2>를 살펴보면, 북한은 1999년도에 2012년을 향한 강성대국건설 전환의 해를 선포한 이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6% 이상 행해지고, 특히 '04년, '07년도에는 무려 전년비 60%이상의 예산지출이 이루어져, 어쨌든 과학기술부문이 농업부문과 더불어 다른 생산부문에 비해 부침없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로 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차 핵실험을 행하는 '06년부터 경공업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07년도에는 4대 선행부문보다 앞서서 경공업의 정상화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²⁸⁾ 4대 선행부문내에도 매년 강조점이 달리 전개되어 왔다. 강성대

25)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2005), 한울, p.57.

26) 이석기, 2009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간담회('09.10.7) 내부 토론자료.

27) 북한은 과거 스스로 중장기 전망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의 우월성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그리고 중장기 경제전망계획을 세우려면 생산력이 일정한도로 발전되고 있어야 하고, 경제부문들 사이의 연계성이 밀접해 있어야 하고, 민족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1985), 평양, p.308.) 경제난 이후 북한경제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없어서 중장기 경제전망계획을 못세우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북한이 2007년도에 경공업혁명을 강조하며 경공업의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은 남한으로부터 신발, 비누, 의류 등 원자재를 유무상통의 방식으로 제공받게 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북한의 매년 예산배분 증가율과 산업생산 정상화 강조 내용

년도	예산규모 (증가율)	과학기술 증가율	농업지출 증가율	선행부문 증가율	경공업 증가율	신년사실 강조점
1999	200.1억원 (0%)	6.3%	11%	-	-	*정책구호: 강성대국건설 전환의 해, 과학기술의 해 *농업>전력, 석탄>선행부문
2000	209.5억원 (4.7%)	5.4%	5.0%	전력, 15.3% 석탄, 12.3%	4.0%	*정책구호: 사상, 총대, 과학 기술3대기동론 *농업>전력, 석탄>선행부문
2001	216.7억원 (3.4%)	-	-	-	-	*정책구호: 선군혁명노선 *4대선행>농업 순
2002	-	-	-	-	-	*정책구호: 수령, 사상, 군대, 제도제일주의 *채취공업>4대선행>농업순 강조
2003	-	15.7%	21.3%	전력, 12.8% 석탄, 30.9%	12.4%	*정책구호: 선군사상구현
2004	3,488.7억 (8.6%)	60%	-	-	-	*정책구호: 정치사상, 반제군사, 경제과학 3대전선
2005	4,057억원 (16.3%)	14.7%	29.1%	-	-	*정책구호: 선군혁명총진군 *주공전선 농업 *농업>4대선행
2006	4,193억원 (3.3%)	3.1%	12.2%	선행, 9.6%	-	*정책구호: 우리식사회주의 진지 강화 *주공전선 농업 *농업>4대선행>경공업
2007	4,341억원 (3.5%)	60.3%	8.5%	선행, 11.9%	16.8%	*정책구호: 경공업혁명, 경제 제일주의 *농업>경공업>4대선행
2008	4,588억원 (5.7%)	6.1%	5.5%	선행, 49.8%	-	*정책구호: 인민생활제일주의 *4대선행, 기초공업>경공업, 농업
2009	4,826억원 (5.2%)	8%	6.9%	선행, 8.7%	5.6%	*정책구호: 2012년을 향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 *금속>기타선행>채취·화학> 농업>경공업







* 예산규모는 결산기준(단 '09년은 계획기준)이고, 부문별 지출증가율은 계획기준

* '02~'03년간에는 7.1조치의 영향으로 예산규모를 발표하지 않음.

* 부문별 지출증가율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의거, 공칸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내용.

* 2005년 농업부문 지출증가율은 계획기준으로는 29.1%이나, 결산기준으로는 32.5%로 더 크게 집행되었음. 아마도 이는 그 해 10월 1일 단행한 배급제 정상화조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됨.

〈표 3〉 북한의 '99년 이후 중기·부문별 경제계획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00	'01	'02
• 과학기술발전 계획														
	1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2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3차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					
• 기간산업·농업 3개년 연속계획														
• 에너지문제 해결3개년계획														
• 5개년 중기계획 ⁽²⁹⁾														

국으로의 출발을 선포하는 '99년 이래 '07년까지 4대 선행부문내에서 전력, 석탄이 항상 먼저 강조되다가 '08년에는 채취공업이, '09년도에는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이 먼저 강조되었다. 한 마디로 북한은 먹는 문제 해결, 전력 및 석탄생산 문제 해결에 먼저 주력한 다음에 기간산업의 정상화로 이동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겨진 다음, 올해 들어와서는 산업순환 회복의 핵심부문인 금속부문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로는 인민생활문제 즉 경공업문제의 해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80년대 수준의 산업연관관계 회복이 아직 어렵지만, 최근 부분적인 산업연관

계의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 것 같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부문별 중기 경제계획도 세웠다. 즉 앞서 언급한 것처럼, '99년 이후 1,2,3차에 걸쳐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더불어 에너지문제해결 3개년계획('03~'05년), 기간산업·농업 3개년연속계획('05~'07년), 5개년 중기계획('08~2012년)을 세워 과거 중장기경제계획 수준은 아니지만 부분 경제계획의 복원 모습을 보였다. 이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넷째, 인민경제부문에서의 일부 시장경제 기능 허용을 통해 경제적 잉여가 창출되도록 하고, 이 경제적 잉여를 선군경제부문의 축적재원으로 삼고자 하는 '선군시대 축적

29)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각 부문마다 설정된 구체적인 도달 목표와 달성 수치에 따라 생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09.1.5일자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경제정상화 원년에 도달하기 위해 일종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 중임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략을 새로이 수립했다. 북한은 김일성시대에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시행해 나갈 때 축적재원을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구하고 사회적 총생산물을 최대한 생산재 생산부문으로 재배분하는 불균형정책을 시행했었다. 그러나 생산력 파괴로 인한 축소재생산 메커니즘은 과거 방식의 축적재원 조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경제적 잉여 창출의 새로운 경제공간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즉 이미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시장 경제공간을 부분 제도화해 체제수호와 연관되어 있는 계획경제부문(군경제 및 일부 당 경제부문)의 활성화·발전의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북한은 선군경제발전전략을 김정일시대 경제정책 노선으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도 동시에 병행해나가게 되고, 이는 2005년에 이르기까지 시행되어 나갔다. 즉 최근에 와서 북한의 문헌에서 우경적 논리로 비판되고 있는³⁰⁾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 당시 선군경제발전전략 성취의 충분조건으로서 도입될 필요가 있었으며, 북한은 경제관리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Ⅲ. 선군경제발전전략의 거시경제적 결과

북한이 21세기 발전전략으로 내세운 강성대국 건설전략은 중국의 현대화전략과 너무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사상으로부터 경제를 해방시키자”라는 구호아래 당과 군에 집중되어 있었던 자원배분권을 재조정하여 궁극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대내경제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하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해나간다”³¹⁾는 선군경제노선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경제정책들을 단계별로 지난 11년간 시행해왔다. 경제학적으로 군수경제의 민수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유효수요 창출효과, 기술도입 및 전파효과, 공공재 공급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견해와 민간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경제의 비효율성 증대효과, 민간소비의 위축을 통한 유효수요 감축효과 등 견해로 엇갈린다. 또는 군

30) “화폐공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그것을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보거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손쉽게 타파하려고 화폐공간을 경제관리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적 요소를 끌어들이는 우경적 견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리원경,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2009), 『경제연구』 제3호, p.40.

31)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1998.8.22자.

〈표 4〉 선군경제정책의 거시경제적 성과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경제성장률(%)	-1.1	6.2	1.3	3.7	1.2	1.8	2.2	3.8	-1.1	-2.3	3.7
명목GNI(억달러)	126	158	168	157	170	184	208	242	256	267	248
광업성장률(%)	-6.1	14.1	5.8	4.8	-3.8	3.2	2.5	3.5	1.9	0.4	2.3
석탄생산량(만톤)	1,860	2,120	2,250	2,310	2,190	2,230	2,280	2,405	2,468	2,410	2,506
철광생산량(만톤)	289.0	378.6	379.3	420.8	407.8	443.3	457.9	491.3	504.1	513.0	531.6
비철금속(만톤)	9.7	11.1	9.6	9.2	8.7	9.4	9.8	10.7	8.6	9.2	9.4
제조업성장률(%)	-3.1	8.3	0.9	3.5	-2.0	2.6	0.4	4.9	0.4	0.8	2.5
조강생산량(만톤)	94.5	124.3	108.6	106.2	103.8	109.3	106.8	116.8	118.1	122.9	127.1
시멘트생산(만톤)	315	410	460	516	532	554.3	563.2	593	615.5	612.9	641.5
비료생산량(만톤)	39	57	53	54	50	41	43	45	45	45	47.9
화학섬유(만톤)	3.5	2.7	2.9	2.7	2.6	2.6	2.5	2.8	2.9	3.0	3.0
농림업성장률(%)	4.1	9.2	-1.9	6.8	4.2	1.7	4.1	5.0	-2.6	-9.4	8.2
곡물생산량(만톤)	388.6	422.2	359	394.6	413	425.2	431.2	457.3	448.3	400.5	430.6
수산물생산(천톤)	627	664	698	746	805	835	1,169	909	923	861	830
식량도입량(만톤)*	163	111	107	173	140	142	121	98	136	20	78
발전량(억kwh)	170	186	194	202	190	196	206	215	225	236	254.6
원유도입량(만배럴)	369	233	285	424	438	421	390	383	384	383	387.8
총무역(억달러)**	16.6	18.1	23.9	26.7	29.0	31.1	35.5	40.5	43.4	47.3	56.8
수출(억달러)	5.6	5.1	5.6	6.5	7.4	7.8	10.2	10.0	9.5	9.2	11.3
수입(억달러)	8.8	9.6	14.1	16.2	15.2	16.1	18.4	20.0	20.5	20.2	26.9
무역수지	-2.9	-3.6	-9.7	-10.2	-8.8	-9.8	-9.9	-13.8	-14.1	-13.7	-15.6
북중무역(억달러)	4.1	3.7	4.8	7.4	7.4	10.2	13.8	15.8	16.9	19.7	27.8
남북교역(억달러)	2.2	3.3	4.2	4.0	6.4	7.2	6.9	10.5	13.5	17.9	18.2
재정규모(억달러)	-	92.2	95.7	98.1	7.1조치	7.1조치	25.1	29.0	29.7	32.6	34.5

주: * 식량도입량 통계는 임수호(2009), 『최근 북한의 식량시정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총무역량은 남북경협규모 + 그 외 북한의 대외무역액을 합한 규모이고, 수출입규모는 남북경협 제외 규모임

자료: 한국은행

수경제와 민수경제간에 상충성과 보완성이 교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³²⁾ 경제난으로 산업연관관계가 분절화된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우 국방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어떤 효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일단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한국은행의 거시경

제통계를 이용해 선군경제노선의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의 지난 11년간의 북한경제 추이를 보면, 일단 1990년대의 극심한 축소재생산의 행진은 멈춘 것 같다. '06~'07년간

32)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2000), 통일연구원, pp.6~17.

다시 마이너스 경제성장율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99년도 이후 전반적 경제성장률 추이는 연평균 약 2%를 나타내고 있다. '06~'07년간 마이너스 성장세는 농업성장률의 마이너스 때문이지, 광업 및 제조업의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 북한의 산업은 '90년대의 산업생산력 추락추세를 일단 멈추고 다소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전력생산의 핵심 원료인 석탄생산량이 '03년 이후 연평균 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연관관계 회복의 핵심 원자재인 철강석 생산량도 '03년 이후 매년 평균 3%씩 증대하고 있다. '03년 이후 비료생산량이 수요의 약 30%만 충족시키는 연평균 약 44만톤만 생산되고 있어도 식량 생산량이 400만톤대를 유지해오고 있고, 식량도입량(원조+자체 수입량)도 99년도 이후 연평균 114만톤 정도로 식량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맞추는 추세를 나타내어 노동력 보전에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발전량 또한 '03년 이후 연평균 약 5%씩의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남북경협까지 합한 무역량은 '03년 이후 무려 연평균 13.8%씩의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 반면에 무역수지 적자가 '98년도에 2.9억달러에 불과했는데, '08년도에 무려 15.6억달러로 늘어나고 있고 비철금속이라든가 화학섬유의 생산량은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원유도입량도 '04년 이후 380여만 배럴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에너지문제의 애로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매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380여만 배럴의 원유도입량은 '80년대 후반 도입량(1,800만배럴 이상)³³⁾의 약 21%수준에 지나지 않아 북한은 현재 에너지수요량의 약 48%정도만 충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규모 또한 7.1조치에 의한 환율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89년 수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마디로 북한경제의 회복세는 전반적으로 미약해서 '80년대 후반 경제수준의 50%~60%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앞으로 남은 2년여동안에 전력을 다하여 2012년에는 80년대 후반 경제수준을 회복시켜 놓겠다고 경제강국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만, 향후 매년 30% 이상 경제성장을 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³⁴⁾

33)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p.105.

34) 조총련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인 지영일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표는 80년대말에 이룩한 최고 생산수준 돌파인데, 그것은 전력 555억kWh(89년), 석탄 8,500만t(89년), 강철 740만t(87년), 시멘트 1,350만t(89년), 화학비료 560만t(89년), 철 8억7천m(89년), 알곡 1,000만t(87년) 생산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1.3~1.5배의 장성속도, 즉 매년 30%~50%의 경제성장률을 이뤄야 달성된다고 고백하듯이 언급했다. '09.10.7자 「조선신보」

〈표 5〉 북한 문헌을 통한 김정일시대 산업설비의 기술개건 동향

구 분	내 용
전 력 부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이후 금강산청년발전소 제2단계공사('00.10.20준공), 태천5호발전소('00.10.21준공), 내평발전소('00.10.27준공), 안변청년2호발전소('09.9.25조업) 등 100여개의 중대형수력발전소 준공 및 조업 시작 • '99년 이후 약 300여개의 중소형발전소 완공 • 북창, 동평양화력, 평양화력, 순천화력발전소, 3월17일발전소 등 대형 발전소 기술개건, 발전기대보수, 일부 설비 신규설치 • 평양 전력계통 개건, 현대화
중 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제철연합기업소 초고압전기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100톤 전기로 설치, 김책제철 설비 현대화, 자동화 추진 및 대형 산소분리기공장 건설 진행, 성진제강·천리마제강 생산공정현대화 • 대안중기계, 희천공작기계, 구성공작기계, 낙원기계 등 생산공정 현대화 • 2.8비날론연합기업소('2010년 정상화예정), 흥남비료공장,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 석탄가스화 설비 개건(2012년 완료 예정) 중 •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명당내화벽돌생산공정, 구장세멘트공장, 해주 세멘트공장, 고산토기와공장, 순천토기와공장, 평양건재공장, 청진씨리카트 벽돌공장 등 조업·준공, 대동강타일공장 신규건설 •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 평양자전거합영회사, 대안천선유리공장,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평양대성타이어공장, 평양집적회로공장 신규 건설, 조업 • 김종태전기기관차 공장, 평양통신기계공장, 성천강전기공장, 6월5일전기공장, 3.26전선공장 등 기술개건
광 업 부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산철광산, 단천마그네사 공장,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주요 광산 설비 현대화 • 북창탄광, 덕천탄광 등 대규모 탄광 시설정비, 전국적으로 중소형탄광 300여개 개발 • 은률, 재령 등 노후 철광산 개건, 현대화 • 라진화광석광산, 12월 5일 청년광산, 용흥광산 등 20여개 광산 준공 및 조업
경 공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맥주공장, 평성피복공장, 평양껌공장, 강서약수가공공장, 봉화 수출피복공장 등 신규 건설 • 신의주화장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일용품공장, 선교편직공장, 평양담배공장, 사리원 신발공장, 원산구두공장 등 수십개 경공업공장 생산설비 부분 일체 교체, 현대화 개건 • 구성방직공장 직기 100여개 도입, 평양방직, 영변견직, 사리원방직, 선교편직, 평양제사, 강서제사, 성천제사 기술개건, 현대화 • 강계목재가공공장 개건·확장, 8.28 청년종이공장 개건 조업 • 112호 닭공장, 구성닭공장, 만경대닭공장 등 각지역에 10여개의 현대식 닭공장 준공, 기술개건

* 주: 이 동향 내용은 '9년 이후 매년의 「조선중앙년감」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 위주로 발췌한 것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모든 기술개건 동향을 다 포함하지 않음. 개관적으로 각 부문별로 어떻게 기술개건들이 이루어졌는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표를 작성함.

그리고 '08년도의 플러스 성장세는 주로 외부경제환경 요소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① 6자회담의 대가에 의한 중유 50만톤 및 기타 발전설비·자재의 유입('07년 7월~'08년 3월), ② 우리 정부의 8천만달러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07년 여름~'08년 초), ③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광산물(무연탄, 철광석)과 철강제품의 급격한 수출단가 상승('07년 하반기~'08년 하반기), ④ 좋은 기상조건으로 인한 식량생산의 호조 등 전적으로 외부경제환경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올해 들어와 이 모든 외부 긍정적 요소가 소멸되고 1874호 유엔 대북경제제재의 시행, 안 좋은 기상여건으로 인한 식량생산의 감소 등까지 작용함으로써 올해 북한의 총GNI는 작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³⁵⁾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시계열적 추이 속에서 볼 때 북한 산업이 그동안의 기술개건정책과 시장기능의 부분활용이 작용한 결과 효율성이 약간씩 증대해가고 있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의 산업개건 노력은 왜 이렇게 미미한 효과만 올리고 있을까?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재정의 위기속에서도 부문 경제계획도 시행할 정도로 경제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능력을 회복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 당국은 '99~'05년간을 경제정상화시기로, 2006년도 이후를 경제활성화시기로 구분할 정도로 '06년도에 드디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지 않았던가?³⁶⁾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경제회복·발전 전략인 선군경제발전전략이 투자배분의 왜곡과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투자재원의 국방공업 부문으로의 선투자는 선행경제부문이나 인민경제부문의 구식 혹은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과감하게 교체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축효과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부족으로 구식 혹은 노후 설비들을 부분 교체하거나³⁷⁾ 아니면 국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주체기술'형 기술개건 작업에 그치

35) 이석기, “최근 북한 산업동향과 남북한 협력과제”, 《통일경제》 2009 가을호, p.79.

36) 조선신보 '06년 1월 16일자. 여기서 북한은 인민경제의 개건현대화, 공업구조의 개혁, 농업혁명,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개선 등이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학자 리기성은 앞의 논문에서 '95~'00년간을 고난의 행군시기, '01~'06년간을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온 시기, '07~2012년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37) 예를 들면 북한 '주체공업'의 상징인 2.8비날론연합기업소가 원료 부족과 설비의 노후화로 지난 10년간 거의 가동 중단, 특히 최종 생산품인 비날론 생산은 포기한 채 중간생산품만 겨우 소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염화비닐직장, 가성소다직장만 부분개건해서 가동되어 왔으나, 2007년 8월 6일 김정일의 현지지도로 자본부족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나가 2010년에는 완전 가동하도록 계획이 진행중이라고 「조선신보」 '09.6.20자가 소개하고 있다.

도록 만들었다. 선군경제발전전략은 북한이 처해있는 총체적 경제발전단계에 유리된 대량살상무기 위주의 군수경제발전을 일부 기록하게 하고, 일부 산업부문의 조업재개 및 가동률을 높이는 유효수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공급경제(supply side economy)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제발전전략이 아니어서 오히려 경제전체에서 군경제부문의 비중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³⁸⁾ 반면 인민경제 부문에서는 블랙 마켓이 확대되는 거시경제적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의 재건은 공급경제의 애로를 타파하는 기초원자재부문의 완전 정상화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신규 설비의 대규모 도입 및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하고 대외경제협력력이 필수적인데, 북한의 전략은 결국 자력갱생형 프로젝트로서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선군경제발전전략의 실행 정책인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기술개건사업이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북한 산업설비들의 부분 조업이나 생산공정의 부분 기술개건 등에 그쳤는데, 일부 생산공정에서의 기술개건은 이와 연관된 다른 생산공정과 병목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동되지 얼마되지 않아 재차 기술적 애로를 일으켜 설비의 수리·보수 과정을 반복케 하여³⁹⁾ 의도한 만큼의 생산성 증대를 초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공업이나 선행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문헌들은 소개하고 있다. 경공업부문의 경우 아마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소요 때문인지 몰라도 완전 기술개건 형태로 기술개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많아 이런 애로현상 소개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북한은 현재 2012년 강성대국 목표⁴⁰⁾를 달성하기 위한 '선군속도'를 외치고 있는 중이다. 즉 "지난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경제장성(성장)속도"를 주문하며⁴¹⁾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으로 이를 달성하자고 주민

38) 성채기 외의 실증적 연구(2003)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경제난과 함께 선군경제발전전략은 과거보다 군경제 부문이 GNI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유도하였다.

39) 산업현장과 관련된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무리한 시간 단축을 통한 자력갱생식 기술도입과 설비의 기술적 애로를 수많은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기사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09.2.4일자 「로동신문」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3년이 걸리는 초고전력전기로의 설계를 단 세달만에 끝 내었고, 바로 '09.2.20일자에 주요 부품의 제작전투를 또 다시 벌리고 있다고 하며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0) 2012년 강성대국의 경제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전력 776만kw 생산능력 구축, 석탄 3,600만톤 생산, 철도 화물수송능력 7,320만톤, 식량 1,000만톤 생산, 평양에 주택 10만세대 건설, 비료 100만톤,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자동차 1만대 생산, 기술집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앙일보」 09.8.2일자.

41) 「로동신문」09년 1월 31일자,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업" 기사.

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자원제약 문제를 ‘주체기술’의 개발로 해결하고,⁴²⁾ 최고조의 노동강도로⁴³⁾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과거 북한의 경제성장 방식의 반복으로서 이미 경제의 비효율성과 왜곡만이 초래되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군경제발전전략은 '90년대의 극심한 생산의 무정부적 상황을 극복하고 산업순환 회복의 기미를 어느 정도 초래하였을런지 모르지만,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는 북한경제를 도약(take-off)시킬 수 없는 ‘현실부정합 정책’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⁴⁴⁾ 북한당국은 1950년대 후반과 같은 ‘천리마기적’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지만, 오늘의 북한경제 토대와 외부 경제환경은 그 당시와 다른 조건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은 ‘빈곤의 함정’ 경제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비교우위전략을 채택해 경제의 현실적 제약조건 탈피부터 모색하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90년대에 심각한 공급경제의 위기를 겪

고 난 후 김정일정권이 추구한 경제회복·정상화정책은 세계체제적 차원의 현실사회주의체제 이후에도 존속되는 북한사회주의 재생·재건 차원의 전략으로서 수립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은 '90년대 이후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세계경제질서에 편입하고자 시장화와 비교우위발전전략을 채택했던 것과 달리 기존 북한산업구조, 특히 국방산업의 정상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선군경제정책을 북한경제의 회복·정상화정책 방향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하는 '98년부터 곧바로 국방산업의 정상화·발전에 핵심인 과학기술발전정책을 첫 번째 경제회복·정상화를 위한 실행정책으로 내세우고 다른 산업부문보다 지난 11년간 5배나 넘는 예산지출투자를 해나갔다. 그리고 다른 산업부문에서 하지 못하는 5개년발전계획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되고 폐쇄화된 산업설비들을 전수조사한 후 선택과 집종의 원리에 따라 산업설비들을 기술개건, 즉 정상가동하기 위한 설비대체·갱신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방산업과 이와


42) 이 때문에 북한의 해외로부터 자본재 수입은 개혁개방 초기 중국이나 베트남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현재 197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설태』 (2007) 참조.

43) 그래서 2009년 올해 150일전투, 100일전투 합계 250일전투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내년에도 전투방식의 경제건설방식이 지속되어나갈 것이다.

44)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경제노선을 중심으로”(2009), 《수은 북한경제》 2009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30.

연관된 기간산업, 선행산업 등의 경우에는 국가 재정자금 및 광물자원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자금을 투입한 반면, 나머지 산업·기업들은 해당 기관·지방인민위원회·자체 기업소 등의 분권화조치에 따라 스스로 노력해서 기술개선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전력 등 선행산업부문 등의 회복을 위한 예산지출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나머지 인민경제부문들은 시장기능을 부분 활용하는 정책, 즉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경제적 잉여도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경제회복·정상화전략의 결과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여전히 '80년대 경제력 수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일단 '90년대의 극심한 공급경제 위기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산업순환의 회복 기미도 보이게 된 것 같다. 또 이원화전략에 따른 경

제관리개선조치의 결과 경제의 효율성도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경제내에서 선군경제부문 즉 군경제부문의 비중 확대 및 인민경제내 암시장의 확산이라는 이중 왜곡현상이 초래되었다. 선군경제정책으로 미사일·핵 등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2012년에 성취하고자 하는 '80년대 수준의 경제력 회복은 아직 요원한 가운데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시장경제공간의 급격한 확산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의 이원화전략을 수정하고 시장통제와 더불어 인민경제부문의 개인적 부를 몰수하는 것과 다름 없는 화폐교환조치까지 내리게 되는데, 이는 김정일의 경제회복·정상화전략인 선군경제전략의 모순만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순의 극대화는 그간 북한의 정책 시행방식을 볼 때 아마도 또 다른 경제정책의 널뛰기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년 제9권 2호
- 권영경, “북한경제체제의 복합적 딜레마와 미래 전망”, 『수은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겨울호.
- _____, “최근 북한경제정책 변화 추이와 전망”,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봄호.
- 김석진, 『무역통계로 본 북한의 산업재건실태』, 한국산업연구원, 2007.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출판사, 2000.
- 김정일, 『당의 과학기술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평양, 2003.
- 리기성, “새로운 혁명적 고조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고 있는 조선경제”, 『2009년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자료집』, 2009.8.
- 리승필,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은 집단주의 원칙을 구현한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방법”,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6년 제3호.
- 리영남,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경제관리개선의 중요원칙”,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6년 제4호.
- 리원경, “화폐, 화폐유통은 계획적 경제관리의 보조적 수단”,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9년 제3호.
- 림병호,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계획적경제관리원칙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55권, 2009년 제3호.
- 린이푸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백산서당, 2001.
- 배종렬, “김정일의 북한경제 10년: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2004 북한경제심포지움 발표논문집, 통일연구원, 2004.
- 성채기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양문수외,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연구』, 2008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 연합뉴스, 『2002 북한연감』, 2002.
- 이 석,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의미”,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구소, 2009.10.
- 이석기, “북한경제의 현황과 남북경협”, 2009 민화협 정책위원회 경제분과 간담회 내부 토론자료, 2009. 10. 7.
- _____, “최근 북한 산업동향과 남북한 협력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9 가을호.

-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 한울, 2005.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2001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집(제3권)』, 통일부, 2001.
-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통일연구원, 2000.
-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 북한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9년 여름호.
- 정영섭,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노선”, 『경제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양), 2006년 제2호.
- 조선노동당출판사 간부용 강습제강,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리마대진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 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데 대하여』, 200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역사연구소,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2005.
- 조선로동당출판사, 『우리 당의 선군정치』, 2006.
- 조영국, 『탈냉전기 북한의 개혁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6.
- 조용기, “최근 북한경제개혁동향 및 체제전환 사례분석”,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철학연구소,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 평양, 2000.